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내 손으로 바꾸는 서울”… 시민제보가 이끈 서울시정의 변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

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척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민 제보를 더욱 밀도 있게 의정 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시민제보 처리 및 정책 환류 체계의 내실화에 나선다.

제보 접수 및 종료 시기를 앞당겨 의원들이 제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호정 의장은 “시민제보가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라며, “2026년에도 다양해진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소중히 경청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유의미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엔진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습니다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 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 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훌륭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범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밀에

서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훌륭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외공무 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 구성을 통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가

제도적 허점 속에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着手하겠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서는 의회의 책무다. 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는 성찰과 개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까지 도의회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입건된 도의원은 없다.

송민수 기자

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현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로 완성”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면 정부 지원인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본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

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현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하였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정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

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며 “그 만큼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현장에 담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과 소통해 왔으며 이번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통해 대학생 인턴들이 언제나 시민 편’인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첫 의사일정 소화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준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해양 방지对策을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 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서 관련 법령 개정 조건·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채봉 기자

붉은 말의 기운이 흐르는 2026년!

출렁다리로

여주의 매력을 있다

